

“새로운 정치 리더십 통해 민주주의 치유·복원해야”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이명규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승재 광주시 상인연합회장

“건강한 보수 진영 재편 필요”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적 혼란 극복을 위해 ‘건강한 보수 진영으로의 재편’과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 교수는 “2025년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 이후 조기 대선·재보궐이 치러지는 등 격동의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보수’가 제대로 형성돼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경쟁,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존중하는 보수 세력이 있어야만 민주주의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현재 한국의 보수 세력은 단순히 ‘이재명에게 대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극단적 사고로 위헌 행위를 한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 대오각성 등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국민의 실망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이번 정국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의 중요성을 여실히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민주시민의 기본적 공감 능력이 결여된 윤석열을 보며 ‘속칭 엘리트가 국정 지도자의 요건이 아님’을 알게 됐다”며 “벌써부터 여야의 조기 대선 후보자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과연 이들 중 온전한 대통령감이 있는지는 심히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국민의힘의 ‘이재명 안 된다’나 민주당의 ‘이재명 단일대오’ 같은 뻔한 얘기가 아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개혁안”이라며 “기준과 다른 국정 운영·리더십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지속하기 위한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시민 교육과 정치인 양성 시스템 등도 마련·점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국정 혼란 사태, 민주당도 책임”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국가적 혼란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전 민주당이 자행한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책임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전남 국립대 신설 등 주요 현안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미 승인한 사안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상 추진한다면 반드시 설립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일은 중앙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국토균형발전과 광주·전남의 산업 발전을 위해 조만간 전남도당 특별위원회를 신설, 민주당이 삭감한 전남의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당에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올해도 변함없이 전남도와 국민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내외부적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통합위원장으로서는 2026년 있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인재 발굴과 함께 전남도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지역정체성 확립으로 경쟁력을”

이명규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과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2% 이하의 저성장 시대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국정 혼란까지 겹치면서 주변부인 지역이 깊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광주는 문화도시라는 브랜딩을 해냈지만 사실상 농업도시라고 생각한다. 과거 도시개발을 통해 양적성장을 이뤄냈지만, 현재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기업, 문화가 부족하다. 그렇기에 국정이 혼란스러울수록 빠르게 타격을 받는 것”이라며 “광주는 그간 도약할 기회를 매번 피해 갔다. 광주만의 뿌리산업을 마련해 놓지 못해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면서 “질적 성장이란 결국에는 개인의 선호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자체의 특색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특히 “먹고 살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라는 주민참여 도시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포르투알레그리에서는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편성을 결정한다”며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행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주도 시민들만의 학습공론장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우리 도시만의 특색이 무엇인지,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기자

“전례없는 경제난…국민지원금을”

김승재 광주시 상인연합회 회장은 “전례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등 실질적인 서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위축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업종과 관계없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많은 상인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국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등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상인들이 직접적인 내수 회복 효과를 느낄만한 정책이 가장 절실하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같은 지원책 역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시장과 상점가에 돈이 원활히 유입되고 순환되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지원책이 확대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 위축을 심화시키는 ‘정국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안정이 뒷받침돼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국이 안정된 이후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지금보다는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으니,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서민경제의 싹쓸이 상인들은 모두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국가적 혼란 극복·희망의 첫걸음은 중도정치”

기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올해 설 연휴동안에 불만만 드라마는 뭘까. ‘윤석열 감독, 김용현 주연, 이재명 특별 출연의 계엄-탄핵 막장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게 또 있을까. 작살로 잡은 생선, 기관단총, 도끼 등 흥행요소들이 차고 넘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시민임을 자부하는 호남사람들은 최장 9일에 이르는 설 연휴 동안 이 권력 드라마를 ‘냉철하게’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해법과 미래의 지도자상에 대해 생각해보자.

요즘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초유의 3가지 상황’을 연일 목도하고 있다.

첫째, 21세기 대명천지에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나 다름없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실패하고도 당당하게 항변하는 모습을 지구촌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둘째, 세계 어느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법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불응할 수 있는가? 윤

대통령 측은 적반하장으로 “법이 무너졌다”면서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하지만, 도대체 계엄 선포로 헌법과 법률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망신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셋째,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당한 특급 비상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와 외교 등 국정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지막지하게 가하기 시작한

전방위 압박을 최상목 대행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을 상대로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하기는 커녕 ‘탱크처럼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설 연휴 내



내 ‘폭력적 드라마’를 보는 국민들의 입에서는 한숨과 분노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더 나은 지도자가 등장할지도 회의적이다.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중도 정치론’을 강력히 제시하고 싶다. 다소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야·보수와 진보의 양극단 정치에서 비롯된 만큼, 양극단 세력의 죽기살기 싸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중도시대’의 도래가 절실하다고 본다. 2030세대와 자영업자, 여성들이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도층은 탈정치·탈이념·탈진영의 성향이 강하다. 좌파가 Left wing, 우파가 Right wing이라면, 중도는 Center다. 트럼프 대 바이든, 트럼프 대 헤리스의 대선에서 여실히 보았듯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갈수록 양극단 대결이 치열해지고, 막판에 중도층이 대세를 결정지었다. 양극단 정치의 패턴을 보면, 분노정치→팬덤 형성→박빙승부→불복투쟁→정치회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회복의 피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바야흐로 중도층이 세력화되고 중심세력이 되어 한국정치를 주도

해나가야 할 때가 왔다. 그런 점에서 호남 정치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 그동안 호남은 민주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대립과 좌우대립의 한 축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호남이 대한민국 중도정치의 1번지로서 국민 대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편향성을 경계하면서 중도정치인들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자기 대통령도 이념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중도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웠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 ‘권력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총리(김종필-박태준)와 청와대 비서실장(김중권), 국정원장(이종찬)에 3공-5공-6공의 구 여권 인사들을 중용한 덕분에 IMF라는 미증유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IT 벤처기업 육성 등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중도주의는 이념보다 실용을, 정치보다 민생경제를, 진영보다 국민 전체를 중시한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계엄과 탄핵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극단 시대가 끝장나고, 중도시대가 속히 와야 한다.

이번 설 연휴기간에 호남사람들이 ‘좌우충돌 드라마’를 보면서, 중도정치와 중도시대, 중도 대통령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